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 입구 없는 성으로 가는 길

성 안과 마을 사람의 관계도 묘하다. 성 안의 사람들은 성 밖의 사람들을 교묘하게 지배한다. 그러나 외지에서 온 촉랑기사에게 잠자리를 선뜻 내줄 사람은 없다. 마을에서 소외당하기 때문이다. 성의 관리가 한 가족의 딸에게 보여 준 지나친 관심을 거절했다가 이 가족 모두가 철저히 단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마을 사람들은 굴종을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여차피 달라질 것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묻지 않고 사는 것,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긴다. 성의 지시를 법으로 받아들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본적도 없고, 성 안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다는 태도다. 굴종이 힘 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능력임을 강변하는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카프카의 '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소수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많은 힘의 공간에 대한 은유가 된다. 그렇다. 공간은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공간을 생산한다. 특정한 공간에서 권력이 생기며, 공간의 이름이 권력과 동일시 되는 현실을 보면 맞는 말이다. 이렇게 현실과 은유가 교차하는 세계에 찾아온 그냥 K라고 불리는 촉랑기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성의 입구를 찾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성문은 열리지 않는다.

은유로서의 '성'은 우리가 무엇으로 읽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무 준비도 없이 유행 따라 성이라는 권력을 욕망하거나 성 안에 대한 환상으로 굴종의 대열에 자신을 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작품은 경고한다. "성으

로 가는 길은 여러 있어. 어떤 때는 그 중 하나가 유행이면 대부분 그리로 가고 또 다른 게 유행이면 모두 그리로 몰리죠."

유행이란 욕망의 전이이고 투영이다. 이 지점에서 마을과 성의 경계가 모호하고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마을 위의 성이 상징하는 권력의 대리자는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해서 성으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 차단되고 통제된 것이다. 이쯤 되면 은유가 아니라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현실의 '다큐'다. 마을 일을 위해서 온 촉랑기사를 막아 선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다. 권력의 주변에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린 자들이 이들이다. 여전히 우리는 섬겨 모실 '절대 영주'가 필요한 것인가?

작품 속 권력자 클럽을 실제로는 본 사람은 없다. 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서나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클럽을 만나려고 촉랑기사는 온갖 비루한 짓을 다 하지만 헛수고다. 어쩔 수 없이 촉랑 대신 학교의 잡일을 하다가 마침내 말을 돌보는 임시 허드레 일꾼이 된다.

입구가 없는 성은 권력 욕망을 은유하는 공간이다. 우리의 욕망을 대리하는 영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생존하는 존재다. 그래서 영주를 모시는 곳에는 언제나 뜻이 통하는 크고 작은 현실의 마을들이 생겨나고, 마을들끼리 서로를 적으로 삼는다. 이때 영주는 꼭 사람이 아닌 가지, 이념, 맹신 등 다할 수 있다. 이런 영주를 모시는 한, 입구 없는 성 안과 마을의 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다시 묻자. 영주가 꼭 필요한가?

현실보다 현실을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 정말 실감 나는 요즘이다. 흔히 현실의 실제에 상응하는 언어를 찾지 못할 때, 수많은 은유가 생산된다. 특히 사회적 소통 방식으로서의 은유 사용이 그렇다. 그래서 현실은 은유 뒤에 숨고 은유는 현실에 이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세상과 그 배후의 사태와 힘을 은유하기, 이에 가장 탁월했던 작가 중 한 사람이 프란츠 카프카(1883-1924)다. 특히 미완성으로 끝난 작품 '성'은 작품 전체가 은유다. 유난히 난해한 작품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느 겨울날, 눈 덮인 작은 마을에 촉랑기사 K가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의 실체가 드러난다. 촉랑기사가 마을에 머물려면 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아무리 가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다. 게다가 아무도 성으로 가는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답답한 촉랑기사는 이렇게 말한다. "성이 있는 산에 가까이 다가가는 듯하다가, 마치 일부러 그런 듯 구부러져 버렸다. 성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 꿈꾸는 2040



오태화  
위민연구원 이사

## 준비 없이는 행복도 없다

는 사실이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이로울 일이다. 효율성을 올리고 편리함을 늘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은 이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발발로 인해 아직 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맞닥뜨리게 된 전면적 비대면 사회는 우리의 일상에 낯선 감각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일자리를 직접 위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취업을 위해 기술과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맞닥뜨리는 우리는 전례 없이 불안하다. 2017년 이후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한 불안감과 고립감 역시 특수 우울증을 증가시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소외감은 퍼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두려움을 더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낸 우리의 기술과 격려야 하는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거대 금융사 중 한 곳이 오는 2021년부터 'AI 은행원'을 시범 도입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AI 은행원 적용 점포를 약 200여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금융사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내세우며 2025년까지는 AI가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2025년까지 대면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은행원이 AI 은행원으로 '대체'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백 년 뒤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금융사의 계획에 따르면 몇 안 돼 내년에는 AI 은행원 점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4년 뒤부터는 상당수의 현장 은행원이 AI 기술로 대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정치의 침묵이 죄가 되는 시대이다. 가까운 미래에 금융권을 시작으로 각 직군이 저마다의 상황에 따른 계획 속에서 소멸하고 대체되기 시작할 것이다. 효율성과 경제 논리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무모한 경쟁에 다수의 직업군이 내던져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지킬 마지막 '골든 타임'인 것이다. 정치가 아직 개입해 많은 이들의 일상을 지킬 귀하고 급한 시간인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선 주자들의 입에서 시대에 대한 고민과 일상을 지킬 방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서로에 대한 혐오와 미움만이 가득한 것을 보며 안타까움이 크다. 많은 정치인 역시 이에 동조하며 저마다의 진영의 가치만을 높이 드는 것도 안타깝지만 하다.

준비 없이는 행복도 없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치에 요구한다. 목숨을 걸고 대비하자. 치열하게 고민하자. 그리고 제 일처리 공감하자.

##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복지서비스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짐을 나누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 정신건강 정책의 파트너는 정신의료기관이며,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 95%는 의료법인에 위탁하고 있다. 즉, 현재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는 의료적 패러다임을 중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복지의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라는 소수성을 가진 동질적 집단 내에서도 정신장애인은 의료적 관점만 강조되면서 차별을 받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장애인 복지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조에 따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즉, 이 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은 그 법을 통해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으면 된다는 판단으로 '중복 수혜'를 막고자 시행된 것이지만, 정신건강복지법도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여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별을 한다.

현재의 법제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

는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환경 차별은 바뀌지 않는다. 생활과 교육을 지원하거나 절차 서비스를 보조하는 등 이들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정신장애인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찾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신장애인을 상징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이 경험하는 장벽과 함께, 장애 유형 내에서도 또다시 배제되는 이중적 장벽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경제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지역 복지가 상생·공존하고 동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1조에서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하게 한다'는 말로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웃과 어울려 살고 싶다고 지역사회에 간곡히 호소해왔다. 모두가 누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법과 제도가, 또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다. 이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 社說

### 갈수록 급증하는 재활용쓰레기 대책 마련을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했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최근 폭염까지 겹치면서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대면 소비 일상화와 함께 무더위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음식과 온라인 쇼핑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광주 5개 자치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하루 평균 84.9톤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83.3톤에 비해 1.6톤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 쓰레기 선별업체들이 '성수기'로 쥘 여름철이 되면서 반입량이 크게 늘고 있다. 북구 대촌동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의 경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30톤에 불과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매일 40톤 가까이 반입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최근 둘러본 선별장에는 입구부터 재활용 쓰레기 더미가 5-6m 높이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 직원들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를 압축해 기계차 세 대로 실 새 없이 퍼 날랐지만 끝이 보

이지 않았다. 이처럼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은 식당 등 업소보다 가정의 배달·포장 음식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체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지난 1-23일 매출이 전달 같은 기간보다 47%나 증가하기도 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소 업체들의 보관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반입이 어려워지면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입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수거 중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민은 결국 집에 쓰레기를 쌓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막으려면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배출이 불가피하다면 재활용이라도 늘려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것처럼 세척 후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 배달·포장 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 뒷받침도 서둘러야겠다.

### 언론중재법 개정 순기능보다 악용 소지 많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허위·가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다섯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무겁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 개혁이라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러 모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언론학계나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니 독소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올려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것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실제로는 공인과 공적 영역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할 공산이 크다.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드는데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

상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중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해당 언론사에 지은 조항도 문제다. 특정 정치 집단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언론의 보도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몰아붙이는 것도 옳지 못하다.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도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입법이다"라며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마저 크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 민주당은 당장 언론중재법 처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無等鼓

영화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이한열 열사가 숨진 6월항쟁을 다뤘다. 영화는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 죽어간 젊은 청년들의 비망록이기도 하다. 관객들은 물론 동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한열이를 살려 내라'라는 제목의 곁개 그림을 잊지 못할 것이다. 최후탄에 맞아 피를 흘리는 이한열을 부축하는 장면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당시 로이터통신 특파원이 찍은 사진을 보고 회화 최병수 씨가 화폭에 옮긴 것이다.

월항쟁 시기를 자신의 대학교 1학년 때인 1979년으로 착각했던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민주열사를 찾아다니는 쇼는 그만두고 친일과 독재 세력 기득권을 위해 출마한 것을 자백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한열 열사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저희 나이 또래에 누가 있겠냐"라며 '역사의식 부재' 질타에 대해 반박했지만 글썩...

맨체스터대 제롬 드 그루트 교수의 저서 '역사를 소비하다'에는 역사를 소비하는

## 역사의식

자유 기고가 김정희 씨가 펴낸 '1987 이한열' 6월항쟁의 기억을 회상하는 책이다. 열사가 의식을 잃은 날부터 장례식이 치러지는 마지막 한 달의 궤적이 오롯이 담겨 있다. 당시 안기부는 세브란스 병동을 감시하고 경찰은 시신을 압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다행히 열사는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묻혔지만 그날의 역사는 아픈 상흔으로 남아 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기습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한열 열사 벽화를 보며 '부마(항쟁)인가?'라고 묻는 일이 있었다. 부산 민주공영 행사장에서였다. 아마도 6

여러 양상이 나온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국민성, 향수, 상풍, 깨달음이 나 지식의 형태를 비롯해서 증언, 체험, 폭로 같은 방식으로 다뤄진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곧잘 역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처럼 '국민성'이나 '상풍' 등과 연관되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역사의식은 정체성이나 정치 비전과 연계된다. 바야흐로 숨 가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던 단체 신채호 선생의 말이 떠오른다. 그 말을 다시 '역사를 모르는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다'로 바꾼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박성진 문화부부장skypark@



김용권  
국제학박사  
사회복지법인 진산(津山) 이사장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위치는 여전히 낮고, 그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차별과 편견은 이들을 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정신장애인 160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은 타 장애인 자살률보다 3배 가량 높고 전체 자살률보다는 무려 8.1배 높다. 이런 현실에도 장애인복지법은 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안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언론은 정신장애인의 편견을 부추기는 보도들을 무책임하게 쏟아낸다. 수년간 투쟁해도 바뀌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의료 환경과 현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들을 외면하며 같은 비극을 반복해야 할까.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4월 20일 20일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